

이희섭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TCS 역량 강화 굳건한 제도화와 홍보 강화가 전제조건

- 한국정부도 TCS 잘 활용해야



박진범

KBS 시사교양1국 PD

前 KBS 베이징PD특파원



이희섭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은 1962년 생으로 1987년 제21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이후 일본, 방글라데시,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등의 재외공관을 거쳤다. 국내에서는 동북아과장, 2차례의 대통령실 파견 및 국가안보실 파견업무를 하였다. 지난해 9월 중국 측 어우보첸사무총장을 이어서 TCS의 제7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였다. 인터뷰는 2024년 6월 4일,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에 있는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에서 진행되었다. <편집자 주>

이희섭

제21회 외무고시 합격

前 주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前 駐방글라데시대사관 참사관

前 영국왕립국제문제연구소 방문연구원

前 국가안전보장회의 파견

前 대통령비서실 파견

前 외교부 동북아과 과장

前 駐오스트레일리아공사참사관

前 駐후쿠오카총영사관 총영사

前 駐인도네시아공사

前 대통령실 파견

前 국가안보실 파견

前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글로벌교육부장

現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

- 지난해 9월 취임을 하셨고 제가 그때도 현장에서 축하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한중저널> 독자와 편집위원회를 대표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87년에 외무고시에 합격하시고 긴 세월 동안 여러 나라를 거치셨는데, TCS(T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공식명칭은 한일중3국협력사무국이지만 인터뷰이와의 협의를 거쳐 독자들에게 보다 익숙한 용어인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으로 사용-편집자 주)에서 일하신 것은 이제 8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느낌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제가 2006~2007년 동북아1과장(일본업무담당)으로 있을 때 한중일 협력을 다루었습니다. 지금은 동북아협력과에서 협력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협력과도 생겼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세안플러스의 틀 이외에 한중일이 따로 모인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죠. 그런데 우리 정부 주도로 아주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국은 2007년 6월에 제주도에서 최초로 한중일 외교장관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참석했던 아소 다로 외교장관이 회담 후 이듬해 총리대신이 되면서, 2008년 12월에 고향인 후쿠오카에서 최초로 한중일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해마다 돌아가면서 개최하게 되었는데 그 흐름이 이어지다 보니까 제도화 차원에서 사무국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은 2011년도에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즉 TCS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가 사실은 한중일 협력에 대해서는 2007년 당시 실무과장때부터 나름대로 아이디어와 생각은 있었는데, 지난해 3국협력사무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당시에 가졌던 포부나 기대, 목표 그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업무를 해보니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한중일 협력이 양적으로 많이 발전해 있었는데, 이에 따라 기대와 설레임과 함께 책임감이나 사명감도 강하게 느꼈습니다.

지난해 취임 이후 당면한 현안이 3국정상회의를 조속히 개최해서 3국협력을 다시 본 궤도에 올리자는 것이었죠. 3국협력의 복원이 가장 중점과제였고 그 추진과정에서 7개의 장관급회의도 열심히 개최하고, 그리고 청년교류 프로그램 즉 스피치콘테스트, 청년대사 프로그램, 그

리고 언론인교류 프로그램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이 조금씩 갖춰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 3국정상회의가 4년 반 만에 열렸는데요.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3국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맡는데 그래도 한국의 사무총장이 재임할 때 개최되어 더욱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회의의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4년 반 만에 어렵게 재개됐는데 무엇보다 장기간 정체된 3국협력을 복원하고, 정상화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를 정례화 하자는 것이죠. 사실 정례화는 예전에 없었던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확인을 하고 정상들이 다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그리고 국민의 실생활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협력 분야들, 즉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저감과 같은 환경문제라든지, 고령화나 보건문제, 일본과 중국은 최근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 재난방지 문제라든지, 4차산업혁명시대에 첨단기술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공급망문제, 그리고 미중전략쟁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복잡한 측면도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하고 구체화시키는 것 등이 있죠. 이를 위해 장관급회의를 앞으로 개최해서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장관급회의는 외교장관 이외에 어떤 분야가 해당됩니까?

외교장관회의는 정상회의를 위해서 꼭 해왔고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경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중국은 특히 경제가 쉽지는 않은 어려운 상황이라 3국 간에 경제협력이나 경제회복 특히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는 서로가 잘 헤쳐나갈 수 있고 경제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잘 협의하자는 것이죠. 경제통상장관회의는 아직 개최가 안 됐지만, 이런 것을 정상회의의 후속조치 차원에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장관회의가 당장 6월 중순에 개최됩니



이희섭사무총장이 <한중저널>박진범총편집위원에게 지난해 제정된 TCS의 공식마스코트인 따오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 TCS)

다. 중요 합의사항 중에 하나인 캠퍼스아시아 프로그램 확대라든지 이런 문제도 후속조치 차원에서 논의하려고 하죠.

–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공동선언에서는 ‘비핵화’라고 들어갔지만 북중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중국이 한중일정상회의를 같이 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한반도 주변정세 안정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 공동선언문에 3국협력사무국의 역량 강화가 명기되었는데, 지난 10여 년 사실 3국협력사무국이 역할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역량 강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역량 강화 관련해서 과거 3차례 정도 정상공동선언이나 발표문에 들어가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이행보다는 3국정부나 정상들이 지지한다, 지원한다는 식의 선언적인 의미가 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실천적 의지가 담긴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이나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전부터 3국 협력기금을 설치해서 중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사업도 추진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각국의 상황이나 사정이 달라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고 분담금을 늘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 증액을 계속 요청하고 있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35명인데 각자 전부 열심히 제 몫을 다 하고 있고 1인 2역, 3역까지 하면서 사업이 늘어나더라도 다 열심히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때 후속조치도 이행을 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 3국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희섭사무총장이 <한중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일중정상회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 TCS)

– 이번 공동선언문에 한중일FTA가 명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9월 새 협의이사회 취임 이후 지금까지 중단된 한중일FTA가 예전만큼 경제효과는 덜하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경제효과뿐만 아니라 비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있어서 3국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큰 플랫폼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중일FTA 협상을 재개하는 것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3국정부간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번 3국정상회의 관련해서 중국은 왜 총리가 오느냐, 그전에 리커창총리 때는 그런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요즘은 리창총리의 중국 내 위상과 관련해서도 그런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1999년 마닐라 ASEAN+3 정상회의 계기에 가진 한일중 정상의 비공식 조찬모임에서 시작한 한일중정상회의에는 중국 측은 국무원총리가, 일본 측에서는 내각총리

대신이 참석해 왔습니다. 중국이 기본적으로 국제회의도 참석에 있어 주석과 총리가 서로 역할분담을 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 3국관계도 각자의 양자관계가 일단 기본이 된다고 보면 최근 한일관계는 굉장히 호전이 됐다고 보는데, 반면에 한중관계는 아주 악화됐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양국관계가 좋아야지 3국관계도 좋아지는 거니까 2016년 사드배치 발표 이후에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는 한중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3국 관계도 각자의 양자관계가 기본이 됩니다. 거꾸로 3국정상회의 개최는 불안정한 양자관계를 개선하는 모멘텀을 조성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3국정상회의를 통해 정상 간의 만남이 이뤄지면서 관계가 풀려가는 계기가 됩니다. 건전한 양자관계가 3국협력의 토대가 되고, 3국협력의 심화는 다시 각각의 양자관계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3국정상회의에서도 양자정상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조성하

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아시아패러독스’ 극복을 위해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작금의 한중일 3국 간에는 “신뢰의 위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호신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민들 간의) 상호 신뢰 및 호감도가 20%대의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 3국협력사무국은 이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한중관계가 수교 30년이 되고 과도기를 맞이했는데 앞으로 30년을 내다보면서 상호신뢰를 착실히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교류를 확대하고, 캠퍼스아시아 프로젝트도 확장해서 문화·인적교류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지자체교류입니다. 사실 중앙정부 사이에 정치, 역사, 안보, 영토적 요인으로 교류가 쉽지 않아도 지역 차원에서는 영향을 덜 받고, 서로의 이해관계라든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교류를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해 제가 취임한 이후 3~4개월 만에 8번 출장을 갔는데, 그중에 7번이 지방이었습니다. 우리는 청년교류나 문화·인적교류, 그리고 지역 교류 3개의 축을 뒷받침해서 풀뿌리교류를 활성화시켜 국민 간에 상호신뢰를 증대하여, 양국관계의 저변을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 지금 얘기하신 거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한중관계에서 국민들의 상호호감도 또는 신뢰도가 최저수준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양국 간의 정무적인 관계가 어떤 계기로 갑자기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 인프라가 되는 양국 국민들 간의 관계가 계속 좋지 않으면 양국관계의 획기적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교류, 문화·인적교류, 지역교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더 획기적으로 국민들의 의식을 바꿀 만한 그런 게 있을까요?

사실은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소위 ‘아시아패러독스’, ‘동북아패러독스’라는 게 소위 역사문제, 영토분쟁, 안보

문제, 북핵문제 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깔려 있는 미중전략경쟁과 민족주의정서가 대립되고 점점 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더라도 상호신뢰를 쌓아놓지 않으면 스프르 무너집니다. 사실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속 꾸준히 해야 하지만 이런 밑바탕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왕도란 없는 것입니다.

– 3국이 상호신뢰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 위해서 언론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3국협력사무국이 언론인교류 프로그램도 주최하셨는데, 3국 언론인교류의 필요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언론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3국협력의 필요성을 널리 인식시키고 함께 공유하며 협력의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3국협력 전반적으로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한데, 사실은 소셜미디어에 떠돌아다니는 정보가 비대칭적이지 않습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것을 일부 언론이 그대로 인용하다보니까 서로에 대한 반감이 증폭되고, 비화되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건들에 대해 자제를 할 수 있을지, 자정노력을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가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일3국협력국제포럼(IFTC)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지만 올해 6월 중순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IFTC에서도 디지털 시각에서 양국 국민의 감정이 안 좋아지고 반감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는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실 언론은 센세이셔널한 주목을 받는 것이 라든지 부정적인 것을 주로 기사거리로 삼죠. 그래서 미담은 그다지 큰 기사가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가능하면 미담을 실으면 양국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인들이 양자관계뿐만 아니라 3국협력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하고 있는 3국 언론인교류 프로그램도 비록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이희섭 TCS사무총장은 언론의 역할에 대한 <한중저널> 박진범총편집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3국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언론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며, 이를 위해 3국 언론인교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제공: TCS)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언론인 간에 상호이해와 신뢰를 쌓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언론인교류는 과거에 저도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좀 더 지속되고,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지도에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을 검색하니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으로 검색해서 찾아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내 명칭이 ‘한일중3국협력사무국’으로 바뀌어서 온라인지도에 등록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3국협력사무국’으로 검색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는 여전히 ‘한중일’이란 용어도 쓰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죠?

한중일이 아니고 원래 우리가 2011년도에 사무국 만들어 국제기구로 등록할 때 명칭이 한일중3국협력사무국이

었습니다, 한중일이 아니라.

– 그동안에 계속 ‘한중일’로 사용했거든요, 지도에도 한중일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것은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는 입에 ‘한중일’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중일한’이 입에 붙어 있어요. 중국사람들은 3국하면 ‘중일한’이라고 하죠. 일본은 ‘일중한’이 입에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부터 자꾸 ‘한일중’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하지만 곧 익숙해질거라고 봅니다. 2009년 한중일정상회의를 시작할 때 일본에서 했고, 다음이 중국, 다음이 한국 이런 순서로 돌아갔죠. 따라서 한국 기준으로 하면 한일중이 되는 것이죠. 외교장관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급 회의가 21개가 있는데 회의 명칭에 개최순서를 따라 한중일과 한일중이 모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의 한국, 중국, 일본 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중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이희섭 TCS사무총장은 <한중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임기동안 TCS의 제도화와 함께 3국의 정부, 국민, 언론, 싱크탱크 등이 TCS의 존재와 함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역설했다.(사진제공: TCS)

데 이런 공식명칭과 별도로 3국협력을 얘기할 때 입에서는 한중일이 더 익숙하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 아직 임기가 꽤 남아 있지 않습니까, 포부랄까요, 지금까지 역대 사무총장들이 있었는데, 이희섭사무총장만의 업적이랄까요, 이거 하나만은 내가 기억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도화 문제입니다. 유럽통합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장 모네가 한 말이 항상 저의 머릿속에 있는데, 그의 회고록에는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제도 없이는 아무것도 지속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3국정상이 합의해지만 그것이 꾸준히 갈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라든지 관행이라든지 이게 마련이 되지 않으면 지속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조금씩 스텝바이스텝으로 쌓아나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사무국이라는 것 자체가 제도화의 상징이지만 이 사무국 자체가 일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선 사실은 제도화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3국정부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측면의 문제가 있는데, 지금도 유엔이나 다른 국제기구를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12~13년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틀이 잡히지 않은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틀을 잘 잡아서 3국정부가 완전히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국협력을 하려면 3국협력사무국뿐만 아니라 정부, 국민, 언론, 싱크탱크 이런 여러 주체가 3국협력의 본질이나 3국협력의 목표나 비전에 대해서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지 함께 가는 것이지 저희만 고민한들 3국정부가 이해를 못 해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국민이 3국협력이나 협력사무국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를 통해서 홍보가 안 되면 별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장 모네도 가장 중요시한 게 언론과의 관계였죠. 장 모네로서는 언론네트워크에 모든 것을 걸었죠. 더더군다나 유럽통합을 할 때는 유럽 내에서만 독일, 프랑스 등 주변 나라만 가지고는 소용이 없잖아요. 미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장 모네는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미국언론과도 계속 네트워킹을 했죠. 그게 자기 업무의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였죠. 언론미디어와의 네트워킹, 그래서 제가 보아오포럼 가서도 3국협력사무국을 좀 많이 알려져서 국제기구로서 홍보도 많이 하고자 했습니다.

— <한중저널>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국관계가 사무총장님과 TCS와 함께 획기적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